

새만금 신공항 개발 제동 “안될말”

민주 전북 국회의원들, ‘개발 기본계획 취소’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조치하면 될 일... 이해할 수 없어
새만금 신공항, 단순한 지역 SOC 아닌 국가 전략적 자산”
국토부 등에 절차적 정당성·환경 대책 보완·강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운·이원택·한병도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결코 받아들이 수 없으며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전북의 미래를 그려려던 180만 전북도민의 꿈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이나 서천 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적 사유를 들어 기본계획 취소를 판결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 조치하면 될 일이지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어느 일방의 편향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비록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이 좌초된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경제성만으로 수도권만 성장하고 지방은 퇴보해야 하는 것인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명확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사업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 인프라를 호남권으로 확대하고 전북 및 서해안권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RE100 산단 조성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새만금 개발사업과의 연계에 필수적이다. 새만금 트라이포

트(공항·항만·철도) 없이는 항공 물류, 기업 투자,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이 본격화될 수 없어 새만금 전체 개발사업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중국, 일본, 동남아 주요 거점 도시와의 항공 네트워크 확보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대책을 보완·강화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180만 전북자치도민에게 새만금 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전북의 대도약을 견인할 새만금의 심장”임을 강조하며, 일시적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전남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 공동인장을 낸 가운데, 문승우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정상 추진 전력투구

민주 소속 의원들 “법원의 취소 판결에 유감... 균형발전 역행”
국토부에 “새만금, 선택 아닌 필수... 즉시 항소해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공항의 정상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논리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에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다.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현재의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고, “전북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새만금 공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할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이만호 기자

“양질의 아파트 건설, 확고한 의지”

전북 출신인 김운덕 국토교통부장관의 아파트 공급대책과 관련, 국민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 사업에 뛰어 드는 것을 골자로 한 9·7 공급 대책과 관련해 “LH 아파트를 일반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것처럼 양질의 아파트를 지겠다고 하는 게 이번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LH가 시행하고 민간에서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많은 분이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왔다”며 “30위권 건설회사에서 2024년, 올해 2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65% 정도 (참여)했다. 50위권으로 확대해나간 거 77%까지 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능한 시공사가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며 “시공사에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행을 주관할 LH 재정 역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부채는 올해 170조원에서 2027년에는 219조5311억원까

김운덕 국토부장관, 9·7 공급 대책 관련
민간이 시공 맡는 도급형 참여 방식 거론



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사업과정에서 LH가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당장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민간 참여로 건설 도급사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시공하면 임대료가 그 후에 LH가 (받게) 되면 그 돈이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국 어느 정도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 것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너무 LH 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유희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협력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의료나 생활복지 시설과 결부시켜서 진행해 국민 반발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면 추가 지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아니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토부 내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고, 국제성, 경찰과 연합해 수사 조직도 별도로 만들 생각”이라며 “국토부 차원에서 각 기관과 연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부동산 투기 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도 “새만금 신공항 포기안한다”

향후 대응 계획 밝혀... 15~19일 도정 주요 일정도 발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전북발전을 바라는 많은 도민의 우려와 함께 지역에 큰 파장을 던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공항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공항 관련 향후 대응 계획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15~19일 전북자치도의 주요 행사와 추진 일정을 상세히 공개하며 열린 행정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 대변인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1심 판결에 대해 김관립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판결에 즉시 항소하고 공항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판결이 국토부와 전북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는 당혹감을 표하며, 향후 대응 계획과 일정을 조속히 정리해 이른 시일

내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국토부였지만, 전북도 또한 사업 추진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만큼 필요하면 소송에 ‘보조참가’ 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 중임을 시사하며, 새만금 공항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새만금 공항 현안 외에 또, 다음 주 전북도가 도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15일에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일산 중앙체육공원에 열릴 ‘청년 축제’에 청년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 축제는 플라마켓, 다양한 체험 행사, 청년 정책 토크 콘서트 등으로 꾸며져 젊은 청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6일에는 복지여성보건의료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상황 및 계획이 공개되며, 도청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공항 관련 향후 대응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회의실에서는 11시부터 전북도-민주당 중앙체육공원에 열릴 ‘청년 축제’에 청년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 축제는 플라마켓, 다양한 체험 행사, 청년 정책 토크 콘서트 등으로 꾸며져 젊은 청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6일에는 복지여성보건의료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상황 및 계획이 공개되며, 도청

서 ‘자활 어울 한마당’이 열려 이웃 간의 화합을 다지고, 건설국 정례 브리핑에서는 대관법 관련 추진 사항이 설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 특장차 산업 박람회’도 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19일 오후 2시에는 도청 내 공연장에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가 열려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농어민·소상공인·청년취농인 등 5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자 살아

남은 등 500여명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갈 권리”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담았지만, 현장 참석자들은 “위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앞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은 농어촌 주민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농민·어민·소상공인·청년들은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농촌에 남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소멸은 국가적 과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공식 출범해 법 제정과 공론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 홍보예산 수억원... 도민 기만”

권요안 도의원, 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 심사 정책질의서
“지난 1년 반 동안 총 4억3600만원 집행... 통합 찬성 홍보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제4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의원) 제2회 추경 예산안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년 반 동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홍보·여론조사·캠페인 등에 총 4억3,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요안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특정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행태, 완주군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에 예산을 낭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경계계획을 심사한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내년 예산 확보 추진실적 청취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위원장 염병섭 의원, 사진)가 제274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했다.

염병섭 위원장은 곤충산업은 시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청년농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건강식품, 미용품 등 상품제작과 마케팅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부위원장은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이

나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매수 위원은 정비사업이 12월에 마무리되는 만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고, 이기열 위원은 농업인들은 남원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이 25% 이상 확보되길 원한다고 밝히고, 김한수 위원은 금양공원은 경관이 뛰어나니 관리와 청결에 신경 써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명숙 위원은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해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면 진행이 어려우므로 처음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